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7월호

*임팩트온의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는 매월 분야별 ESG 트렌드를 주제별로 정리해 제공하는 연중 기획 시리즈입니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7월호 | Monthly ESG Trend Report

임팩트온 홈페이지

<http://www.impacton.net/>

조사 및 작성

01 석유화학/재생에너지/배터리 임팩트온 송선우 에디터

02 반도체/IT/철강/조선 임팩트온 이재영 에디터

03 자동차 임팩트온 홍명표 에디터

04 기후테크 및 순환경제 임팩트온 송준호 에디터

05 공시 및 ESG 리스크 임팩트온 박란희 편집장

편집 디자인

임팩트온 이승진 디자이너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01 석유화학/재생에너지/배터리

Key Takeaways

- 바이든 행정부는 녹색 투자 및 자국 산업활성화 기조에 따라 미국 친환경 기업에 저리 대출,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반ESG를 주도하는 공화당 우세지역 또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유치를 통한 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 데이터센터 급증과 폭염으로 인한 냉방 수요 증가로 인해 20년만에 글로벌 전력 수요가 폭증했다. 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망 인프라 부족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 재생에너지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자 경영 위기를 맞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 태양광 업체 썬파워(SunPower)는 재정 악화로 인해 태양광 신규설치를 잠정 중단했고, 글로벌 인버터 기업 솔라엣지(SolarEdge)는 1년새 임직원 24.5%를 해고했다.

미국, 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움직임... 공화당도 실리주의 노선 택해

바이든 행정부는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Investing in America)’ 어젠다에 따라 자국 친환경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에너지부는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기업 엔텍(ENTEK)에 12억달러(약1조원)의 조건부 대출을 발표했다. 해당 대출금은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인디애나 분리막 공장 건설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림) 퍼스트 솔라의 박막형 태양전지 제조공장/First Solar



미국 공화당 우세 주들 또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최대 태양광패널 생산기업 퍼스트솔라는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등 공화당 우세 지역로 꼽히는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실제, 앨라배마는 20년 동안 매년 250만달러(약 35억원)의 재산세를 면제해주기로 약속했고, 루이지애나는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3000만달러(약 415억원)를 지원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앨라배마와 루이지애나가 반ESG 움직임에 적극 가담하는 주들 중 하나라는 점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기업의 공장 유치가 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자, 실리주의 노선을 택하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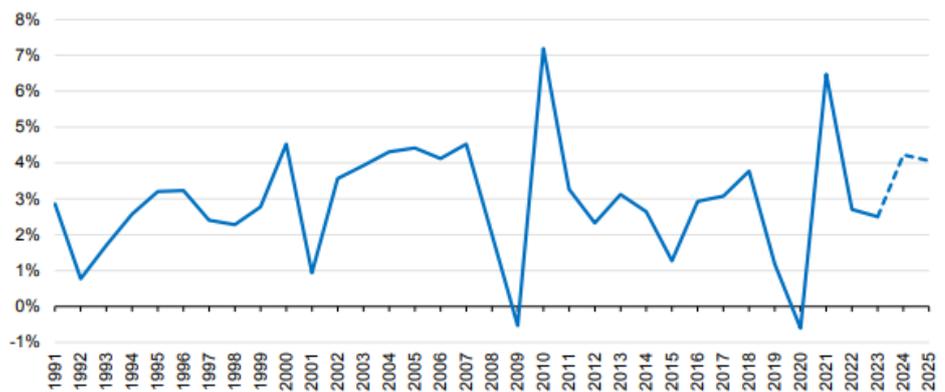
- ☞미 공화당 '뒷발'들, 퍼스트솔라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세금 감면에 기술 교육까지
- ☞美에너지부, 엔텍에 12억달러 조건부 대출...국산 배터리 산업보호 취지

20년만에 글로벌 전력수요 폭증... 전력망 과부하 문제 심각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4년 전력부문 연중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전력 수요는 20년 만에 가장 빠른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글로벌 전력 수요는 4% 가량 증가할 예정으로,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10년과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의 특이 상황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IEA는 전력수요의 급증에 대한 원인으로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수요 폭증과 폭염으로 인한 냉방 수요증가를 꼽았다.

문제는 글로벌 전력망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석유와 LNG는 송유관을 통해 운송되지만, 재생에너지는 전력망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기에 전력망에 끼치는 부담이 더욱 크다. 실제 블룸버그NEF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망을 확장하는 데 약 24조1000억달러

(그림) 글로벌 전력수요 증감률 추이/ IEA



IEA. CC BY 4.0.

러(약 3경3000조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100조원에 달하는 전력망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은 전력망 개선을 위해 향후 6년간 8000억달러(약 1109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은 35억달러(4조 7480억원) 규모의 전력망 직접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력수요 총당’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재원을 필요로하기에, 민간차원의 전력망 투자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 [IEA, 시와 에어컨으로 20년만에 세계 전력 수요 급증](#)

☞ [기후 변화로 인한 정전 피해 속출...전력망 투자 급선무](#)

재생에너지 불황 장기화에 경영위기 직면한 기업 속출... 운영 중단부터 대규모 해고까지

재생에너지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약화된 태양광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지난 19일, 미국의 대표적 태양광 기업 중 하나인 썬파워(SunPower)는 신규 태양광 설치를 잠정 중단하고, 기존의 임대계약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운동을 중단한 셈이다. 이에 썬파워의 주가는 하루만에 45% 가량 급락했고, 금융시장 리서치 전문기업 GLJ는 사실상 썬파워의 주식가치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5일, 글로벌 태양광 인버터 기업 솔라엠티지는 400명 규모의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체 임직원의 8.5%에 달하는 수치다. 솔라엠티지는 지난 1월에도 900명에 달하는 인원을 해고한 바 있다. 솔라엠티지가 대대적인 감원에 나서는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다. 태양광 인프라의 과잉공급과 가격경쟁로 인한 수익성 약화

(그림) 미국 주요 태양광 기업 중 하나인 썬파워는 신규 태양광설치 중단을 선언했다./SunPower



로 인해 매출감소와 영업손실의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솔라엠티의 주가는 지난 1년간 무려 88%나 하락했고, 사 측은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감행했다.

[👁️미국 태양광 기업 썬파워, 끝없이 추락](#)

[👁️글로벌 인버터 기업 솔라엠티, 400명 규모의 대규모 감원계획 발표](#)

Editor's Comment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전력망 안정화’ 등 에너지 산업이 다양한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업계의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자국에 생산 시설을 건설할 경우, 역외기업에게도 정부 혜택이 제공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여 해외 진출을 꾀할 필요가 있다.



02 반도체/IT/철강/조선

Key Takeaways

- 반도체 업계가 물 리스크에 직면했다. SK하이닉스는 충청북도 청주 사업장 물 스트레스 지수를 '고위험'으로 규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 빅테크들이 반독점 규제에 발목을 잡혔다. 미 공화당 부통령 후보도 현 바이든 정부의 빅테크 반독점 규제를 두둔하고 나섰다.
- 철강업계가 불황 속 활로 찾기로 '전기화 전환'을 택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도입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IMP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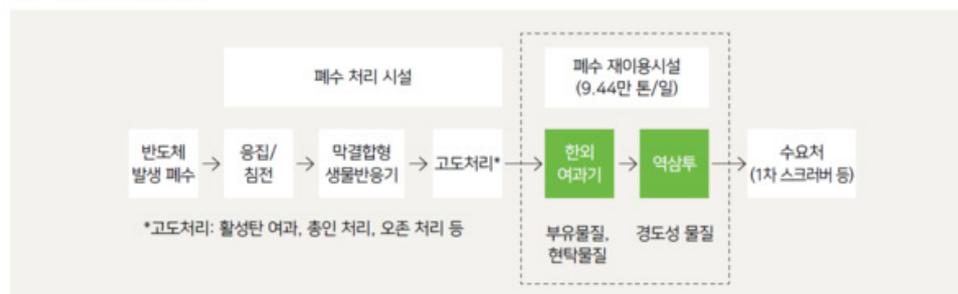
| 많아도 적어도 문제... 반도체산업 '물 리스크'

24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 대만 증시가 휴장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개미' 때문이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눈은 TSMC에 쏠렸다. 혹여 태풍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될까 우려해서다. TSMC는 지난 4월에도 규모 7.2 강진으로 생산을 중단, JP모건 등 글로벌IB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시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멘트를 실시간으로 내놓은 바 있다. 다행히 TSMC는 태풍 비상 체제를 발동, 정상 가동했다.

TSMC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61%를 감당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다. 극단적 '폭우' 위험이 반도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림) 이천 사업장 폐수 재이용 프로세스 / SK하이닉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4

폐수 재이용 프로세스(이천)



물 리스크는 국내에서도 발생했다. SK하이닉스가 24일 공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4’](#)에 따르면, 충북 청주 생산현장의 물 스트레스 지수는 ‘고위험(High)’으로 나타났다. 물 스트레스란 세계자원연구소(WRI)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청주의 물 부족은 2023년 ‘(Medium-high)중간 위험’이었다가 올해 고위험으로 높아졌다.

청주 생산시설은 인공지능(AI)용 메모리로 각광받는 HBM 등 D램 신규 생산기지로, SK하이닉스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이곳에 5조3000억원을 투입,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HBM 물량이 내년 생산분까지 '완판'된 가운데, 청주 공장의 용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HBM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도체칩 제조는 기계를 냉각하고 웨이퍼 시트에 있는 먼지나 이물질을 세척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우 등 강수량 변동성 증가는 칩 제조업체들의 생산 안정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물 리스크 해결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폐수 재이용 확대 시스템을 확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용수 공급 배관 이원화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4](#)

[☞위대한 M7, 비참한 M7으로 전략... 미 증시 최악의 날, 이유는?](#)

| 빅테크 겨냥한 반독점 규제 강화

빅테크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반독점 규제에 부딪쳤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EU)이 메타에 반독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U는 2022년 12월 메타가 자사의 중고거래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동시켜 건전한 시장 경쟁을 왜곡시킨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EU 반독점 감시기구는 메타가 경쟁사의 광고 데이터를 자사의 이득을 위해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경쟁사의 데이터를 메타가 자사에 유리하게 활용했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벌금 규모가 지난해 메타 글로벌 매출의 10%인 134억달러(약 18조5643억원)에 달할 수 있지만, 통상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또한 빅테크 독주를 저지하고 나섰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공화당 J.D. 밴스 상원의원이 바이든 정부의 빅테크 반독점법 집행 움직임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월 밴스 의원은 X(구 트위터)에 “늦었지만 이제 구글을 해체할 때가 됐다”며 “우리 사회에서 정보의 독점적 통제권은 명백히 진보적인 기술 기업에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EU는 삼성전자와 구글 간 AI 협력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구글이 삼성 특정 기기에 소형 AI 모델인 제미니 나노를 사전 설치하기로 한 계약의 영향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정보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기기에 제미니 나노를 기본 탑재해 타 AI 개발사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빅테크를 겨냥한 서구권의 반독점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영국과 유럽의 반독점 규제기관은 AI 산업에서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메타, 18조원 벌금 위기... EU, "플랫폼 독과점 더 이상 안 봐줘"](#)



| 철강산업, 업황 부진 속 전기화 전환 가속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 중국이 대대적인 전기화 전환을 추진한다. 핀란드 비정규기구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는 11일(현지시각) 보고서를 내고 올해 상반기 중국의 석탄 기반 제철 사업 신규 허가가 없었다며, 이는 2020년 9월 ‘이중 탄소(Dual carbon goals)’ 목표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중 탄소는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점으로 찍은 후 206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기후 전략이다.

CREA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상반기 승인한 710만톤의 신규 철강 생산 프로젝트는 전기 아크로 용광로(Electric Arc Furnace, EAF) 기반으로, 2026년까지 2억톤의 철강 산업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이 가능하다. 이는 EU 철강 부문 전체 배출량과 동일한 수치다.

CREA는 이번 조치의 주요 원인은 EU CBAM이라고 설명했다. CBAM으로 인한 부담금이 2030년까지 최대 59억위안(약 1조1200억원)에 달할 수 있는 만큼, 전기화 전환을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석탄 용광로로 만들어진 기존 철강제품은 2030년까지 톤당 250위안(약 4조7000억원)의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전기로 기반 철강제품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0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기간 중인 CBAM은 철강, 시멘트, 수소, 비료, 알루미늄, 전력 등 6개 부문에 적용되며 2026년 1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5일 한국신용평가는 ‘철강산업 2024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 글로벌 철강수요가 역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통화 긴축 및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업황 회복 여력은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 포화 및 탄소 전환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은 전기로 구축 등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철강산업, EU CBAM 대응 위해 전기로 전환에 초점](#)

[☞CREA 보고서 : Turning point: China permitted no new coal-based steel projects in H1 2024 as policies drive decarbonisation](#)

(그림) 2023년 역성장한 글로벌 철강 수요가 2024~2025년에도 1%대 제한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철강협회

구분	2021	2022	2023F	2024F	2025F
세계	1,834	1,782	1,763	1,793	1,815
증가율	2.7	-3.2	-1.1	1.7	1.2
중국	952	921	896	896	887
증가율	-5.4	-3.5	-3.3	0.0	-1.0
중국 외	882	861	867	897	929
증가율	13.1	-3.0	0.7	3.5	3.5

자료: 세계철강협회(2024.04)

Editor's Comment

올해 초부터 주가 상승을 견인하던 빅테크들이 AI 수익성 증명 실패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여기에 미국, 유럽의 독과점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하반기에는 TSMC 중심의 AI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될 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EU CBAM이 업황 난조에도 철강업계의 전기화 전환을 이끄는 모양새다.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대선 등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탈탄소화 요구는 견조하다고 볼 수 있겠다.

03 자동차

Key Takeaways

- 올해 초 전기차 판매 부진을 만회하려는 듯,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늘었다. 7월에 파악된 5월 판매량이 23%나 증가했다. 특히, 기아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기록을 갱신했다.
-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을 문제삼아 잠정적으로 관세를 47.6%나 부과하자 중국 제조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미국 국방부가 그린수소로 구동하는 수소연료 전지 트럭을 시연했는데, 주행거리가 무려 2414km나 된다. 상용화된다면 게임체인저가 될 지도 모른다.

IMPACTION

전기차 판매가 전반적으로 호조 보였으나, 테슬라만 유독 부진

지난 7월 주요 전기차 이슈를 살펴보면, 가장 뜨거운 뉴스는 역시 중국 전기를 견제하려는 유럽의 관세 부과 관련 뉴스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다는 뉴스가 많았다.

가장 먼저, 반가운 소식은 기아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기록을 세운 뉴스였다. 전기차 전문 미디어 EV리포트에 의하면, 기아 아메리카는 미국서 올 상반기 기아의 판매 기록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팔아치웠다. 3개월 연속 5000대 이상 순수 전기를 판매, 상반기에만 총 2만9392대를 팔았다. 이는 전년 대비 112%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그림) 최근 미국에서 기록적인 판매기록을 세운 기아의 전기차 EV6 수출형의 이미지./미국 기아 홈페이지.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자국 자동차 시장에서 플러그인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5월 47%를 기록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보도했다. 순수 전기차의 경우 중국 내수 시장의 점유율은 29%였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순수 전기차는 24에서 29%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1에서 18%로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CNBC에 의하면, BYD는 올해 순수 전기차 생산량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BYD는 최근 전기차 판매 800만 대를 기록했다. 중국의 니오(Nio)도 올해 6월에 2만1209대를 판매, 사상 최고 실적을 세웠다.

독일의 BMW도 올해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BMW는 올 상반기에 순수 전기차만 17만9557대를 인도해서 전년 대비 34.1% 증가율을 기록했다. 멕시코의 경우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90%나 성장, 전기차 점유율 2.5%를 달성했다. 멕시코는 중국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용이한 교두보로 생각하고 있어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BYD가 멕시코 공장 건설에 들어갔으며, BMW도 8억 유로(약 1조 2000억원)를 투자, 공장을 지으려 하고 있다.

한편, 테슬라의 고향인 미국에서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1.4%를 기록했는데, 테슬라 판매량은 17%나 감소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판매량은 5월에 23%나 증가해서 올해 초 전기차 시장 위축을 만회했다.

[EU, 중국산 전기차 잠정관세 47.6% 부과](#)

유럽 점유율 7%에 불과한 중국 전기차에 고율의 관세 부과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7월에는 중국과 EU의 관세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EU가 잠정적으로 47.6%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업체들은 EU의 조사에 협조했으나, 결론을 미리 상정하고 벌인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클린테크니카에 의하면, 중국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7%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무려 300개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판매량은 아니다.

배터리와 충전 관련 뉴스 중에서는 스텔란티스의 행보가 눈에 띈다. 79년 역사의 프랑스 연구기관인 CEA와 협력, 5년간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한다. CEA는 25년간 배터리를 연구해온 전문가 집단이다. 스텔란티스는 미국의 고체 전기차 배터리 혁신 기업인 팩토리얼 에너지(Factorial Energy)와 리튬-황 배터리를 개발 중인 캘리포니아 스타트업 라이튼(Lyten)와도 손을 잡았다. 팩토리얼 에너지와 스텔란티스 벤처스의 투자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라이튼은 올해 초 스텔란티스를 포함한 여러 미국 및 EU 제조업체에 새로운 리튬-황 파우치 셀 샘플을 배송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SK온은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 사쿠우(Sakuu)와 협력, 공동개발계약(JDA)을 체결했다. 사쿠우는 3D프린터로 배터리를 인쇄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SK온의 생산 노하우와 결합해서 대량 생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온은 사쿠우가 손잡은 첫 번째 대형 배터리 기업이다.

독일의 BMW그룹은 전폭적으로 배터리 생산을 밀고 있다. 로어바이에른(독일), 데브레첸(헝가리), 우드러프(미국), 선양(중국), 산루이스포토시(멕시코)에 5개의 배터리 생산시설을 새로 짓고 있다. 2025년까지 데브레첸에서 차량을 출시하고 2026년까지 중국, 2027년까지 멕시코에서 생산을 시작한다.

일본의 도요타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사용한 태양전지 스타트업 에니코우트 테크놀로지스(EneCoat Technologies)에 투자했다. 이 스타트업은 태양전지를 분사해서 전지를 제조하는데, 분사하는 표면이 평면이 아니어도 상관 없어서 기존 기술의 단점을 뛰어넘었다.

[☞스텔란티스, 차세대 배터리 개발 위해 79년 역사의 프랑스 CEA와 제휴](#)

[☞SK온과 협업, 3D프린터로 배터리 만드는 스타트업 사쿠우\(Sakuu\)는 어떤 회사?](#)

[☞도요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림) 7월에는 스텔란티스가 활발하게 전기차 관련 활동을 폈다. 사진은 스텔란티스 산하 푸조의 전기차./푸조 홈페이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보급 순탄하게 진행 중 미 국방부, 주행거리 2414km의 수소연료 전지 트럭 테스트

바이든 행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전기차 인프라가 7월에 이정표를 세웠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2분기에 약 700개의 전기차 공공 충전소가 설치됐는데, 이러한 설치속도면 8년 만에 화석연료 주유소의 설치를 앞지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9000개의 공공 고속 충전소가 있다고 한다.

7월에도 수소전지 트럭 소식은 이어졌다. 월마트는 캐나다에서 소매업체로는 최초로 니콜라의 수소연료 전지 트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수소트럭은 주행거리가 800km나 된다. 이런 장거리 주행능력 때문인지, 미 육군도 수소전지 차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클린테크니카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는 NASA, GM 등과 협력해서 그린 수소로 주행하는 수소전지 차량을 개발 중인데 주행거리가 무려 2414km나 되는 시제품을 테스트했다고 한다.

한편, 올해 들어서 맹활약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전기차 제조사 빈패스트는 인도네시아에 딜러샵 오픈에 이어 전기차 공장까지 착공했다. 내년 4분기 생산 목표로 연 5만 대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이다. 주로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을 위한 전기 SUV 차량을 생산한다고 한다.

끝으로, 자동차 제조사끼리의 합종연횡은 7월에도 있었다. 중국의 샤오핑은 폭스바겐과 협업해서 전기/전자(E/E) 아키텍처를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했다. 전기차 등장 이후 훨씬 복잡해진 전기, 전자 아키텍처를 공동 개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폭스바겐이 공동개발하는 아키텍처는 2026년부터 중국에서 생산, 중국 내수시장을 노린다는 계산이다.

(그림) 올해 들어 무섭게 확장 중인 베트남 전기차 빈패스트의 VF8./미국 빈패스트 홈페이지.



도요타라는 강력한 경쟁사를 둔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 3곳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뭉친다는 소식이 7월말 나왔다. 클린테크니카에 의하면, 혼다, 미쓰비시, 닛산은 점점 중요해지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 비용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노린다. 자동차, 특히 전기차의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폭스바겐, 중국의 샤오펑과 손잡고 전기차 E/E아키텍처 생산](#)

[👉 미쓰비시, 닛산, 혼다... 소프트웨어 개발 위해 뭉친다](#)

Editor's Comment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가 홀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하는 형국으로 모델 다변화 등이 필요할 것 같다.

수소연료 전지 트럭에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미국 방부의 초장거리 수소연료 전지 트럭의 테스트 주행 소식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관련 관세 전쟁 흐름은 향후 11월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보인다.

04 기후테크 및 순환경제

Key Takeaways

- 바이든 행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이 대선의 흐름을 타고 관심을 받고 있다. 백악관은 203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조달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와 함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플라스틱 정책에 관한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 글로벌 기업들이 플라스틱 감축 부문에서 퇴보하고 있는 사례가 포착됐다. 에너지 기업 셸은 플라스틱 재활용 약속을 철회했으며, 식음료 기업 다논은 그린워싱으로 법정에 섰다.
- 미국과 유럽의 주요 정유기업들이 바이오 연료사업에서 손을 떼다. 기존 사업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큰 손실을 보게 된 게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줄어든 투자와 함께 시장을 지탱한 충분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름이 알려진 기후테크 기업들도 데스크밸리를 피하지 못했다.

| 美대선과 맞물린 바이든의 플라스틱 정책

미국이 플라스틱 오염 방지에 관한 대담한 정책을 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9일 (현지시각)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조달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목표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2027년까지 식품 서비스 운영, 행사 및 포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연방 조달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2035년까지 모든 연방 운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조달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도 발표했다. 주요 정부 부처들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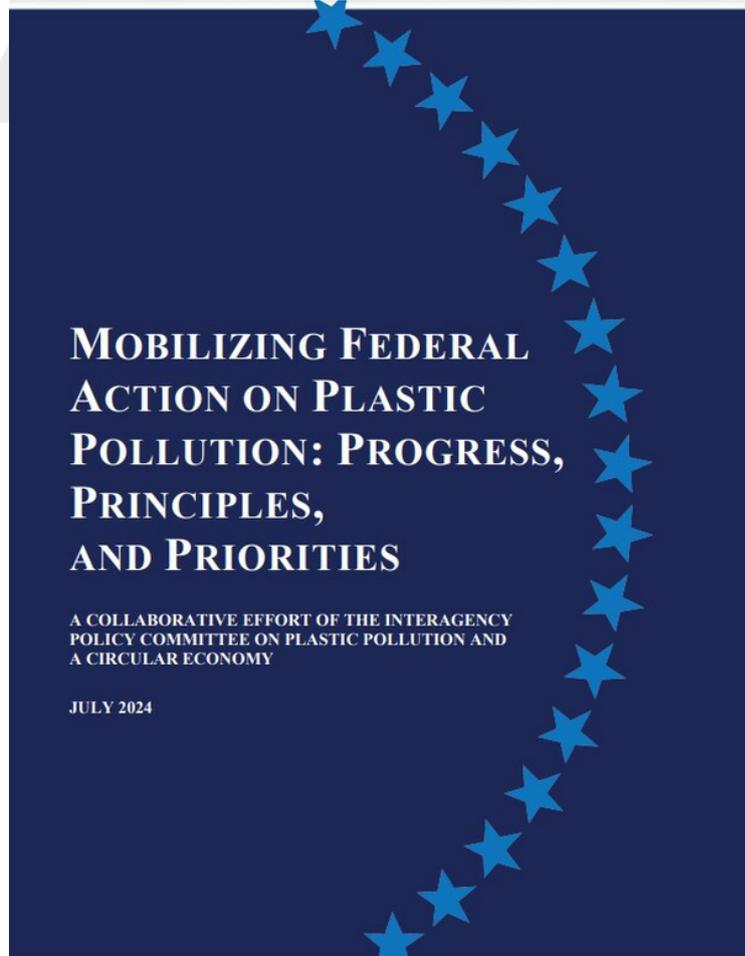
바이든 행정부가 플라스틱 감축 정책을 냈고 맞물려 대선주자인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플라스틱 관련 입장도 관심을 받게 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방 법안을 민주당 상원의원 4명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플라스틱 정책은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미국인들이 높은 지지도를 보인다는 면에서, 대권주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비영리 단체 오세아나(Oceana)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4분의 3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국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WWF가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2개국 국민 2만4000명의 90%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기 원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미국 연방정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새 전략 발표](#)

[👉"플라스틱 빨대 반대" 해리스의 플라스틱 정책은?](#)

(그림) 미국 연방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초의 포괄적인 정부 차원의 전략 보고서 표지./미 백악관



| 산업계, 플라스틱 부문에서 퇴보 움직임 포착

산업계가 플라스틱 영역에서 다소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뉴스가 7월에 있었다.

거대 에너지 기업 셸은 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약속을 조용히 철회했다. 셸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100만톤을 석유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한을 1년 앞둔 현재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공표했다. 그동안 석유화학 업계는 플라스틱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을 주요 대응 전략으로 사용해 왔다. 셸은 플라스틱 재활용 약속을 번복했지만 플라스틱 생산은 확대할 계획이다.

다국적 식음료 기업 다논은 그린워싱 문제로 법정에 섰다. 플라스틱오염연합(PPC)은 다논 미국 지사가 유통하는 에비앙 생수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세 플라스틱과 비스페놀-A(BPA)이 검출됐음에도 '지속가능', '천연', '건강에 좋다'고 홍보하여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PPC는 다논에 대해 허위 및 기만적 마케팅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 [셸\(Shell\), 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약속 조용히 철회](#)

👉 [플라스틱오염연합\(PPC\), 다논 미국지사를 허위 마케팅으로 고소](#)

(그림) 셸의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표지./홈페이지



| 바이오연료 사업, EU와 미국에서 개도국 시장으로 이동

글로벌 정유업계가 바이오연료 사업에서 힘을 빼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화석연료 수요가 급감하면서 적지 않은 화석연료 기업이 바이오 연료로 눈을 돌려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모색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바이오 연료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산업은 현재 위기를 맞고 있다.

주요 정유 기업인 셸과 세브론은 바이오연료 공장 설립을 중단했다. 셸은 유럽 최대의 바이오연료 공장을 당초 지난 4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초 2030년대 후반으로 가동 시점을 미뤘다가 7월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세브론은 지난 3월 미국 내에 있는 바이오 디젤 공장 두 곳의 가동을 멈췄다.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바이오 연료 사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미국과 EU 중심의 시장이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 기반으로 사업을 해오던 주요 정유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사업 손실을 입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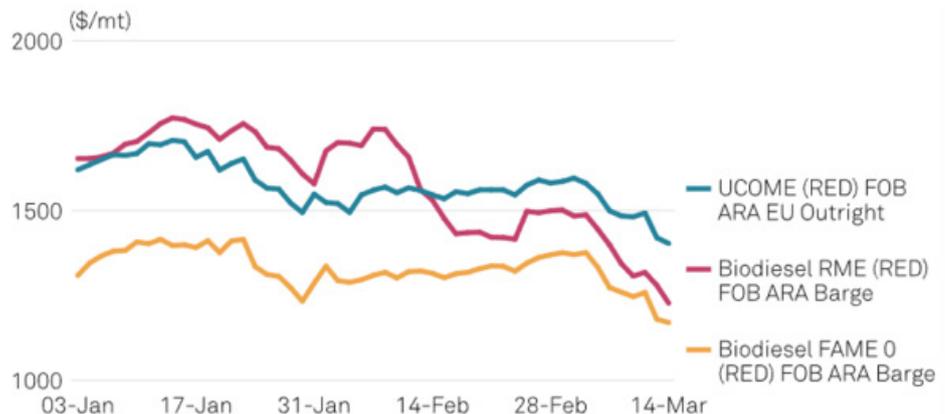
특히, 중국발 공급 과잉은 EU의 바이오 연료 가격이 급락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가는 작년 1월 톤당 1700달러(약 235만원)대를 기록했지만 불과 2개월 만에 1250달러(약 173만원)대로 떨어졌고, 현재까지도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 바이오연료 산업 거품 꺼졌다...사업 손실 마주한 정유업계](#)

[☞ 셸, 유럽 최대 바이오연료 공장 건설 중단 이유...다른 기업들의 넷제로 이행목표 수정 흐름](#)

[☞ 세브론, 미국내 바이오 디젤 공장 두 곳 가동 중단](#)

(그림) 2023년 1분기 유럽의 바이오연료 가격 추이/S&P글로벌



2024 기후테크 데스밸리 흑독... 수요 부족, 스타트업 폐업 속출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데스밸리가 올해 더 흑독해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기후테크 벤처캐피털(VC)의 투자 흐름을 추적하는 미국의 사이트라인 클라이밋(Sightline Climate)은 지난 5일(현지 시각) 2024년 상반기 기후테크 투자가 총 113억 달러(약 16조원)로 2023년 상반기와 비교해서 20%, 하반기 대비 41%가 줄었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28억달러(약 4조원)로 2023년 상반기 42억달러(약 6조원)에서 크게 줄었다.

데스밸리는 큰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던 유명 기후테크 스타트업들도 피해 가지 못했다. 유니버설 하이드로젠(Universal Hydrogen)이라는 스타트업은 지난해 40인승의 수소 연료전지 항공기로 워싱턴부터 캘리포니아까지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최근 1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도 받았지만 결국 문을 닫게 됐다. 해양탄소 제거기업 런닝타이드도 폐업을 했고, 전기 스포츠카 제조업체인 피스커도 7년 만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블룸버그는 특히 유망한 산업으로 주목되던 탄소제거도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세계에 탄소제거 스타트업이 800개 이상 존재하지만, 이들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요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사이트라인 클라이밋은 투자자들이 초기 단계와 성장 단계 스타트업보다 더 성숙한 스타트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갖춘 스타트업에게는 여전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 【박란희의 TalkTalk】 트럼프와 쿠슈너, 수소항공기 파산, 중국 녹색에너지 전쟁 \(기후테크 파산\)](#)

[👁️ 2024 상반기 기후테크 투자 20% 감소...데스밸리 흑독했으나, 보상 확실했다](#)

Editor's Comment

저탄소 경제의 거품이 걷혀가고 있다. 성장 단계의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큰 투자를 받은 이름난 기업들도 수요가 없어 폐업하는 실정이다. 유망한 산업으로 주목 받던 바이오연료 사업도 시장이 옮겨가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 관련 산업의 쇠퇴가 아닌 고도화로 해석된다.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만큼, 각국의 ESG 정책과 시장의 흐름에 밝은 기업일수록 생존은 물론 큰 투자와 사업 기회도 기대해 볼 만하다.

05 공시 및 ESG 리스크

Key Takeaways

- 지속가능성 공시 적용 초기단계인 유럽연합(EU)은 공시 실태와 벤치마킹 사례를 전파하고 있으며, 특히 공시 의무화는 공시 데이터 플랫폼의 수집과 관리를 디지털화하는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공시 시작단계부터 기업들이 스코프 3까지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금까지 가장 까다로운 넷제로 표준으로 알려진 SBTi가 지난 4월 탄소상쇄 허용 지침을 밝힌 이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넷제로아일랜드는 항공사 최초로 SBTi를 탈퇴하고, 구글은 탄소상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엔도 자발적 탄소상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ISO는 내년에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에서 새로운 넷제로 표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의 11월 복귀를 바라는 화석연료 업계는 법적 소송을 더 강력하게 이어가고 있다. 코노코필립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알래스카 국거석유보호구역 개발금지 조치에 대해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년 전 승소했던 미 알래스카의 코노코필립스 월로우 프로젝트가 판결이 뒤집히며 패소하는 일도 있었다. 법적 소송 결과도 예측불허가 이어졌다.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디지털화 중요해져, 미국 기후공시 의무화 SEC가 안되더라도 개별주가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CSRD)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는 CSRD 적용 초반인 점을 감안, 기업들이 공시기준(ESRS) 도입 초기단계에서 나타난 실태와 과제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70%의 기업이 이종종대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기반 접근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90%의 기업이 재무보고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데이터 품질관리를 시작했으며, 85%의 기업이 IT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또한 성명을 통해 ESRS 기준에 따른 공시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CSRD에서는 ESEF/XHTML라는 일정한 디지털 형태로 구조화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데이터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이는 결국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통해 기업들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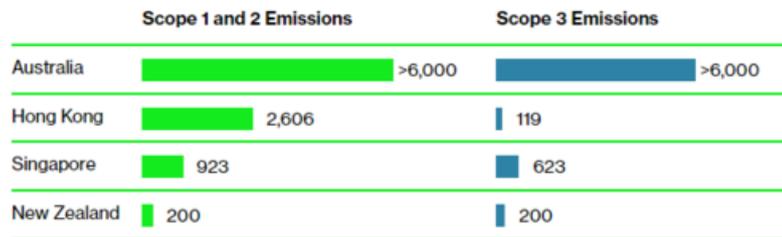
한편, 여전히 지속가능성 공시 규칙을 둘러싼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지난 1월 ‘기후공시 의무화’ 법안 발표 이후 6000여개 기업들이 공시 대상이 되었고, 2024년 7월 회계연도부터 기후공시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다음달 호주 회계기준위원회가 새로운 공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인데, 전체 상장기업의 10% 정도만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후공시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의무화 대응으로 인해 호주 기업들이 거의 마비에 빠진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 또한 현재 10개 주에서 소송이 걸려있어, 현재 진척이 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 피치그룹의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SEC 기후공시 규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개별 주들이 기후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캘리포니아가 SB 253, 즉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10억달러 이상 매출을 올린 기업은 스코프1, 2(직간접 배출량) 뿐만 아니라 스코프 3(공급망 배출량)도 보고해야 하며, 이 보고에 대해 제3자 검증까지 받도록 했다. 뉴욕과 일리노이 또한 자체적으로 기후공시 의무화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는 런던기후행동주간을 맞아 416개 기업이 TNFD를 권장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월 320개 기업에서 30%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참여한 기업은 영국 메이저 투자자인 LGIM, 자동차 제조사 볼보, 인쇄솔루션 회사인 리코(Richo), 중국 명니우유업 (Mengniu Dairy) 등이 있다.

- [👉ESRS 도입 초기 단계의 실태와 과제···EFRAG 보고서](#)
- [👉ESMA, CSRD 준수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IT 시스템 마련해야](#)
- [👉호주 기후공시 의무화, 기업들 마비에 빠졌다?](#)
-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 없어도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

(그림) 기후공시 의무화 영향권에 있는 기업 숫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Source: Bloomberg Intelligence

탄소 상쇄 크레딧이 몰고 온 SBTi의 위기 기업들 SBTi 탈퇴, ISO는 새로운 탄소중립 표준 개발 중

자발적 탄소시장과 탄소 상쇄 크레딧(Carbon Offset Credit)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난 7월에도 논란은 계속되었다. 현재 가장 까다로운 넷제로 표준으로 알려진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가 스코프3 배출 감축목적으로 탄소상쇄 크레딧 사용을 허락하기로 하겠다는 이사회 결정 이후, 직원 반발과 CEO 사임, 후원자인 아마존의 베조스어스펀드로부터의 독립성 논란 등이 이어져왔다.

SBTi는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듯, 111개의 ‘탄소 감축 크레딧(emission reduction credits)’을 조사해, A부터 C등급까지 분류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SBTi는 이 크레딧을 입증하는 증거의 대부분(84%)은 다른 배출원, 흡수원 혹은 배출량 감축수단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A등급의 탄소감축 결과는 비효과적이었고, C등급은 비교적 혼재돼있었다. 결국 보고서는 탄소크레딧을 상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넷제로 전환을 방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기업이 먼저 반응했다. 뉴질랜드 유일의 메이저 항공사인 에어뉴질랜드는 항공사 최초로 2030 기후목표를 철회하고, SBTi도 탈퇴한다고 30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항공사의 경우 전기 혹은 수소 항공기 개발이 더딘 데다,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의 비싼 가격과 부족한 공급 등으로 인해 사실상 탄소상쇄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올해 지속가능항공연료(SAF)의 글로벌 공급은 총 연료 요구량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탄소상쇄 크레딧의 대규모 구매자였던 구글과 같은 IT기업들 또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일 발표된 ‘2024 환경 보고서’에서,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대량 구매를 종료하고, 배출량의 절대적 감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원래 2030년까지 스코프 1, 2, 3에 걸쳐 탄소배출을 50%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로 인해 2019년 대비 지난해 총 배출량이 무려 48% 늘었다.

(그림) 기후공시 의무화 영향권에 있는 기업 숫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유엔을 비롯한 기타 국제 표준기구들도 탄소상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또다른 넷제로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유엔 태스크포스는 기업들이 정부 규제 배출시장 밖에서 탄소 상쇄 크레딧을 사용해, 배출량 감소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난달 24일(현지시각) FT가 밝혔다.

국제 표준화기구(ISO) 또한 새로운 글로벌 탄소중립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2025년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선언, 이 기준이 SBTi를 대체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SBTi, 탄소 크레딧 효과 있나?...논란의 보고서 드디어 발표](#)

[☞ 에어뉴질랜드, 항공사 최초로 2030년 기후목표와 SBTi 폐기](#)

[☞ 구글, "더 이상 탄소 상쇄하지 않아...직접 배출 줄일 것"](#)

[☞ 유엔 태스크 포스, 탄소 상쇄 크레딧 사용 비판](#)

[☞ 국제표준화기구\(ISO\), 2025년 글로벌 탄소중립 기준 발표 예정... SBTi 대체할까](#)

IMPACT ON

트럼프와 해리스의 장외 연장전 열리는 에너지 업계 법적 소송 치열해진 현장

미국에선 트럼프와 해리스 양당 대선주자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화석연료 업계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미 화석연료 업계가 법적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미 코노코필립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알래스카 국가석유보호구역 석유개발 금지 조치에 대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서 생산된 석유는 미국 전체 생산량의 25%에 달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소유토지의 석유개발 제한 움직임에 대해 화석연료 업계는 민감하게 대립해왔다. 소송 결과에 따라 뉴멕시코, 북극 등 기존의 석유개발 금지 조치 또한 철폐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루이지애나 서부 지방법원에서는 미 에너지부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동결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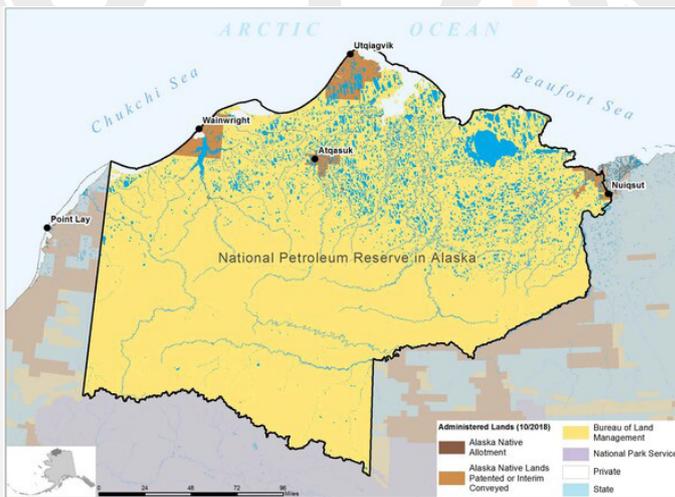
하지만 미 알래스카 지역은 지속적으로 소송이 이뤄지는 지역이어서, 소송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당장 지난달 16일(현지시각)에는 미 알래스카 연방법원은 코노코필립스의 ‘월로우 프로젝트’에 대해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기각했다. 환경단체 어스 저스티스를 비롯한 6곳은 알래스카 석유 시추를 반대하는 온라인 캠페인과 청원을 이어가며 코노코필립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에는 이 소송에서 코노코필립스가 승소했다. 1년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연방법원은 “멸종위기종인 ‘벨루가 고래’에 피해를 미치는 선박의 소음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다.

특히 미 대법원이 40년 된 법적 선례인 세브론 독트린을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소송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브론 독트린은 ‘법적 언 어가 모호할 경우, 이에 대한 우선적 해석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한다’는 판례 기반 원칙이다.

당장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각) “미 환경보호청이 지난 4월 발 표한 화석연료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규칙을 원안대로 진행하라”고 판결 했다. 공화당 주도의 25개 주는 해당 규칙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 번 판결이 특히 주목을 받아왔다. 환경단체는 법원 판결을 환영했지만, 공화당 주들은 EPA 규칙에 반대하는 법적 대응을 지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 ☞ [美 화석연료 업계, 법적공방으로 정책 무효화?...잇따른 소송 제기](#)
- ☞ [미국 법원, 알래스카 석유 임대 판매 기각...환경단체의 승리](#)
- ☞ [美 대법원의 '세브론 독트린' 폐지 결정...EPA의 기후정책 역풍 맞을까](#)
- ☞ [세기의 소송, EPA 대기오염 방지법...공화당 첫 번째 집행정지 시도 좌절](#)

(그림) 알래스카 국가석유보호구역(NPR-A) 지도/ 미국 국토관리청



Editor’s Comment

정치가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예전 같으 면 정권이 바뀌어도 산업이나 무역 정책에서 전임 정권과 비슷한 궤도를 이어가는 전통이 있었지만, 정치권의 분열은 유권자의 대립과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면서, 에 너지업계와 산업 탈탄소전환의 합리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법적 소송이 늘어나 는 것이 그 증거다.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나빠지는 흐름이다. 각 지역 및 정책 흐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